

第293回國會
(臨時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4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10年8月24日(火)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2009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계속)
 - 가. 노동부 소관

審査된案件

- 2. 2009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계속) 1
 - 가. 노동부 소관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22
- 2. 2009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계속) 28
 - 가. 노동부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계속)

가. 노동부 소관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은 뒤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고용노동부차관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존경하는 김성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9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고용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며 서민생활은 어려워지는 등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신속

한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고용창출 토대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노사갈등 관리 강화와 협력 확산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에는 금융위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2조 85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추진한 지난해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1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8%인 2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조 3926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63억 원이 포함되어 총 1조 4089억 원이었으며 이 중 90.8%인 1조 2789억 원을 지출하였고 413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87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5개 기금을 설명드리면 고용보험기금 10조 788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조 9856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5257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844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8472억 원 등 총 19조 8217억 원을 조

달·운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의 집행을 통하여 우선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완화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고용유지 조치를 유도하였습니다.

취업에로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계층별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 등과 MOU를 체결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역점 추진하였고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구직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등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늘리고 특히 구직자가 훈련 과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훈련의 현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결 등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청산팀도 확대하였으며 석면해체작업의 안전성 강화 등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를 도출하여 노사 간 양보교섭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13년간 유예되어 왔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노사 합의도 이루어 냄으로써 자율과 경쟁의 성숙한 노사관계로 진일보하는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자리 사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연착륙 등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일자리입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에로계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각 주체가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임금·근로시간제도 및 관행을 유연하게 개선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조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노사관계도 고용친화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사가 파트너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일자리를 만들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이재갑 노사정책실장입니다.

조재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재홍 노동시장정책관입니다.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입니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입니다.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입니다.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입니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입니다.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입니다.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입니다.

조병기 정책기획관입니다.

한창훈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종길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정철균 감사관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모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8월 11일자로 최근에 취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하공공기관장입니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유재섭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입니다.

양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입니다.

정인수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입니다.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간부 및 산하기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재정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조재정입니다.

2009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정원 현황, 2009회계연도 재원 규모, 2009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기금 결산,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의 순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 및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3실 13관 35과……

○위원장 김성순 좀 간단히……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 조재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팀이고, 소속기관은 47개 지방노동관서, 15개 위원회, 1개 고객상담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727명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은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재원 규모는 총 21조 230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3419억 원, 특별회계 670억 원, 기금 19조 8218억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2%가 감소한 23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08년도 대비 수납액 감소 요인은 고용지원센터 매입이 08년에 완료되어 기타경상이전수입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8%가 증가한 1조 4089억 원으로 이 중 1조 2789억 원을 지출하고 41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887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308억 원이고 이 중 232억 원을 수납하여 전년보다 6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납액 감소 사유는 청사 및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환수액 감소 등에 따른 기타 경상이전수입 감소에 기인합니다.

불납결손액은 99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미수납액은 75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22억 원, 이행강제금 27억 원, 청사 및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11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 2099억 원을 포함하여 1조 3419억 원입니다. 이 중 1조 2226억 원을 집행하고 410억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8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취업지원 등 고용정책사업에 4546억 원, 직업훈련지원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에 3635억 원, 고용평등사업에 315억 원, 노사협력사업에 251억 원, 근로기준사업에 162억 원, 산재보험 및 예방사업에 155억 원, 국제노동협력사업에 139억 원, 청사관리 및 인건비 등 기관 운영에 3023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이월된 410억 원은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금 119억 원, 정부지원청년인턴제지원금 103억 원,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지원금 170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 784억 원은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 집행 잔액 201억 원, 사회적일자리창출 집행 잔액 109억 원, 본부·소속기관·지방관서 인건비 집행 잔액 124억 원, 취업격려수당 집행 잔액 99억 원 등이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9쪽, 10쪽, 11·12·13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15쪽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 현황은 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06억 8400만 원 중 502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03억 9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진폐위로금 454억 원, 건강진단비 43억 원 등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는 없으며 세출예산은 이농 예상 농어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8억 550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경

상이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는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주요 사업비 및 기관 운영비로 5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징수는 없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상담센터 혁신도시 이전 관련 건설비 3억 원은 계약 체결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징수 결정액은 20조 2024억 원이며 이 중 90.5%인 18조 287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총 18조 2873억 원이고 이 중 85.9%인 11조 8559억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 여유자금 6조 4314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고용보험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은 9조 884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6.1%인 8조 7297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보장기금 4조 1892억 원, 재산수입 3712억 원, 경상이전수입 742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4조 951억 원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10조 788억 원 중 사업비로 6조 7245억 원을 지출하고 23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조 4492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2조 52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주요 내역은 실업급여 4조 4731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2조 1457억 원, 고용보험 사업운영비에 105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종합직업체험관 신축 관련 23억 원이며 불용액은 실업급여사업 9440억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5019억 원, 고용보험운영비 33억 원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은 8조 9318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1.8%인 8조 1983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4조 7364억 원, 재산수입 2325억 원, 경상이전수입 1285억

원, 여유자금 회수 등 3조 1009억 원입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7조 9856억 원 중 사업비로 4조 2096억 원을 지출하고 163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 3조 988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주요 내역은 산재보험급여에 3조 4631억 원, 반환금에 1148억 원, 산재보험사업에 888억 원, 산재예방사업에 1621억 원, 산재근로자복지 용자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에 1070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산재보험급여 1506억 원, 반환금 3억 원, 산재보험사업 40억 원, 산재근로자복지 용자 및 산재예방시설 용자 71억 원 등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은 1조 267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8.9%인 492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업주부담금 1110억 원, 사업주변제금 866억 원, 여유자금 회수 2492억 원, 공자기금예탁금 회수 300억 원 등입니다.

29쪽입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5257억 원 중 사업비로 3304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여유자금 162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주요 내역은 체당금지급액 3080억 원, 반환금지급액 34억 원, 무료법률구조지원 94억 원, 기금 및 사업운영비 96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체당금 지급 2억 원, 반환금 지급 1억 원, 기금 및 사업운영비 1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은 355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6.9%인 3442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재산수입 60억 원, 범정부담금 등 경상이전수입 1495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억 원, 용자금 회수 299억 원, 여유자금 회수 1292억 원, 정부내부수입 290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3844억 원 중 사업비로 2551억 원을 지출하고 22억 원이 불용되었으며 여유자금 89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주요 내역은 장애인고용 장려금 1490억 원, 장애인공단 출연사업비 444억 원, 민간경상보조 및 반환금 52억 원, 용자사업비 125

억 원, 기금운영비 400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경상경비 등 예산 절감 2억 원, 집행 잔액 20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수입 결산 현황은 559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3.3%인 5221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체수입 1083억 원, 공자기금예수금 2510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137억 원, 여유자금 회수 1491억 원 등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지출 결산 현황은 8472억 원 중 사업비로 3362억 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344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유자금 185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주요 내역은 기금관리비 및 사업운영비 65억 원, 장학사업 등 근로자복지지원 105억 원, 생활안정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생활안정지원 대부 2786억 원, 신용보증대위변제 61억 원, 실직자 점포지원 9억 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45억 원, IBRD 차관 원리금 상환 등 291억 원 등입니다.

불용액은 생활안정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생활안정지원 대부 3042억 원, 공자기금 예수이자 상환 122억 원, 신용보증대위변제사업 116억 원 등입니다.

36쪽입니다.

국유재산 및 국가채권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유재산은 08년도 말 대비 258억 원이 증가한 5399억 원으로 증감 요인은 토지 171억 원, 건물 130억 원 증가에 기인합니다.

37쪽입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가채권은 08년도 말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서울인력은행 전세보증금 등 국고보조금 미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26억 원, 청사 임차보증금 등 기타수입 7억 원입니다.

38쪽 이후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고용노동부차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원창희 전문위원 원창희입니다.

2009 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준비된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억 5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8억 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은 232억 2800만 원으로 수납률은 전년도보다 10.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사유 중 채납자의 재력부족이나 거소불명의 사유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례적인 수납률 저조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수납금 회수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3256억 5100만 원이었으나 예산현액은 1조 3419억 2500만 원으로 2008년 예산현액 9064억 2300만 원보다 32.5%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1%인 1조 2226억 1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94.8%보다 집행실적은 저조하고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97.4%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사업별 지출액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고용정책사업과 근로기준사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노사협력사업과 고용평등사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정책사업의 주요 증가 사유는 고용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청년인턴제 사업비 346억 원 등 추정 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취업격려수당 지원사업은 추경으로 신설된 한시 사업으로 총예산 110억 원 중 1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여 사업 집행이 매우 부진하였고 지원받은 근로자의 중도 탈락률이 52.41%에 이르러 사업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소득층취업패키지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23억 원 9500만 원 중 4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중 취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취업성공수당과 취업알선 위탁비의 불용률이 각각 71%, 91.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중 경영컨설팅 위탁사업의 경우 지원받은 기업 수는 345개로 계획대비 실적이 86.5%로 높게 나오나 예산집행 실적은 37.8%에 불과하며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위탁사업은 위탁기관의 자부담 비율이 평균 12.3%로 조사되어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신규실업자직업훈련사업의 경우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추경예산 217억 원을 편성하여 총 예산이 1219억 원이었으나 집행액이 당초 예산의 94%에 해당하여 추경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맞춤형 중심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사정책사업 중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지원사업의 경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대비 평균 수혜율은 0.08%인데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혜율은 0.05%에 불과한 반면 300인 이상 499인 사업장 수혜율은 3.7%에 달하여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수혜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그 수혜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평등사업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운영지원사업의 예산은 200억 원인데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96%에서 2008년 1.87%로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수지는 전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확대 등 기금재정 안정화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재예방사업의 산업재해 동향을 보면 2009년도 전체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는 각각 9만 7821명과 2181명으로 전년도 대비 재해자 수는 2015명이 증가하고 사망자 수는 241명이 감소하였고 2009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7조 3157억 원으로 전년의 노사분규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 규모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국가적 중점 추진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의 규모를 보면 고용보험기금 10조 673억

원 등 총 19조 8091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570억 원,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보면 고용보험기금 8조 7297억 원 등 총 18조 2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28억 원, 1.2%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전체의 집행실적을 보면 계획액인 19조 8091억 원보다 7.7%가 적은 18조 2873억 원을 집행하였는바, 실적 저조의 원인은 추경으로 증액된 고용보험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집행 부진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추경으로 고용보험기금 2조 1567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4897억 원 등 총 2조 6465억 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나 이 중 45.7%인 1조 192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과 기타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며 2009년도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2조 1457억 원, 실업급여 지급에 4조 473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의 2009년 말 연말 적립금이 6조 2583억 원 수준으로 하락하고 실업급여와 상관없는 모성보호사업의 적자규모가 3082억 원에 이르고 있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거나 모성보호사업에 따른 보험료 징수 등 별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고용안정사업 중 전직지원장려금사업은 예산 28억 원 중 27억 92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실적은 양호하였으나 높은 1인당 지원비용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재취업률은 2009년 30.6%로 일반적인 노동부 고용서비스센터의 24.5%, 노사공동재취업센터의 31.6%와의 차별성이 떨어지므로 고용서비스센터 및 노동부의 다른 전직지원 서비스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과정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직접 집행함에 따라 보조금법에 어긋나게 집행하였으며 신규센터 운영지원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경비로 신규센터에 필요한 물품 외에도 기존 센터의 운영 경비 및 집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예산집행 방식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사업은 지원대상 직종이 마케팅 등 사무관리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 전체나 비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 사무관리직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일반 직업훈련과 차별화되지 못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동 사업은 종료하고 그 내용은 근로자개인능력개발지원 및 중소기업훈련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별도의 소득관련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연이율 1%라는 낮은 금리로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의 집행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 저소득근로자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평등실현사업 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사업은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업 등 특정 직종이나 특정 규모의 사업장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고 이 중 다수고용장려금은 지원 인원이 26만 8288명으로 실적이 많은 편이지만 정년연장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실적이 적어 지급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성·고령자고용촉진컨설팅지원사업 중 여성고용촉진컨설팅의 경우 여성고용컨설팅 전후에 지원사업장의 여성근로자 수에 뚜렷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일부 기업의 경우 큰 폭의 감소현상을 보여 사업의 주요 목적인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장애인 고용사업장 고용컨설팅사업은 동일 사업장이 연속해서 전혀 다른 주제의 컨설팅을 받거나 세탁물 처리, 인쇄 등의 소규모 회사에 경영전략, 인사관리체계 수립 등 비현실적이고 부적합한 컨설팅이 제공되고 있어 간접적인 컨설팅 위탁방식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 통합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고용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3쪽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보험급여사업은 당초 계획수립 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각 급여에서 자체 변경 증감에 의한 사업집행을 하였는데 정확한 추계에 의해 불필요

한 과다·과소 계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이 중 집행이 부진한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홍보 확대, 지급방법 변경 검토, 급여대상자 발굴 등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의료원지원사업 중 산재의료원 운영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169억 300만 원으로 이 중 148억 6400만 원이 집행되고 20억 66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강원케어센터의 입소율은 69%로 저조하였는데 진폐장애인에 대한 보호·요양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 일상생활 편의 제공 등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사업 중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사업의 2009년도 계획 현액은 계획변경액 54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76억 3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의 국회 확정 후 기술지원 방식을 연초에 변경하였는데 국회 확정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징수 결정액은 1조 2676억 4300만 원이나 실제 수납은 4929억 4600만 원에 불과해 수납률은 38.9%에 불과하고 불납 결손액도 426억 9100만 원에 이르므로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수지 안정과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위해 2009년 12월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2010년 사업주 부담금 비율을 임금총액 대비 2009년의 0.4%에서 0.8%로 2배 규모로 인상하였는데 전년도 국회의 심의 의결 없는 정부 내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부담금 비율 결정은 다음연도 이후 기금의 수입계획, 나아가서는 지출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입니다.

표준사업장설립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예산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도 32%에서 2010년도에 38.3%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회사형 표준사

업장의 경영 안정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의 중심적인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근로자생활안정대부사업의 각각의 집행률이 생활안정자금 91.4%, 체불생계비대부 48.2%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 수정안 제출 당시에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라면 추경과 같은 대규모 계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도한 편성에 따른 집행 부진으로 대부조건을 크게 완화·변경하여 집행하였고 대부 후 대부사업의 성격과 전례에 비추어 대위변제의 발생으로 향후 근로자복지기금의 손실과 더불어 구상채권 회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성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급하게 중점적으로 읽어 드렸는데 좀 잘 분석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어제와 같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 그리고 보충질의를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이정선입니다.

차관님께서 아까 인사말씀을 하실 때 “일자리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성과는 다르다.” 이런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결산 준비를 하면서 노동부에서 많은 자료를 받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름만 다른, 중복되어 있는 사업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조금 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사업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도·농에 관한 지원이 따로따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일을 할 때 거의 봉사 마인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어떤, 예를 들면 웰빙 음식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새로운 직종 개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있어서 근로활동 보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과연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맞춤형 근로활동 보조인을 지원하는 게 좋겠는가라는 부분의 연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결과를 보니까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서민 살리기 예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배정된 추경예산 2조 8000억 원 중에서 무려 1조 9000억 원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중앙부처 39개 기관 성과 달성률 순위에 보니까 노동부가 39개 중에서 3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많은 부분 노동부의 역할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대출사업 있지요? 지금 중소기업에 고용유지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618억 원 중에서 이 중에 83.8%인 51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사업비는 75%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수 용자 예산 부분에서 14%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위탁사업을 하는데 실효성 있는 용자를 받고 용자를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은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용자사업을 하는 곳에만 지금 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탁사업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 담당자 계약직으로 인턴을 67명을 계약했는데 6억 700만 원으로 인턴 계약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행정인턴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출업무를 인턴들이 과연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게 지금 한시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산망 확충에 만 7억 5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산망 못 쓰게 되었지요, 이 사업이 미소금융으로 넘겨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1차 답변을 올리고 제가 최종 답변을 올리면 어떨까요?

○**이정선 위원** 예, 답변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용자금 집행률은 14%에 불과한데 부대 경비인 위탁사업비 집행률이 75%에 이르러서 이게 본말이 전도되었다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이정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략하게…… 저도 질문할 게 많은데……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이 사업의 성격상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고용 유지자금 대부에 대한 수요가 적은 가운데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홍보나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대한 지출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걸로 들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취업지원 관리 및 실효성에 관한 문제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외에 우리 실업 문제를 좀 폭넓어 보자, 이런 취지의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연수 예산 183억 중에 78%인 143억이 101개 연수기관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4637명이 지원이 있었는데 중도 탈락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관 101개에 도대체 얼마씩 나눠 줬는지 저희 방에 그게 구체적인 게 안 와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중에 취업률이 0%인 기관에도 36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41개 기관 수가 0%입니다. 지금 모집인원은 1100명인데 중도탈락 수가 400명에 가깝고요. 또 연수기간, 시간도 6개월에서

12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원래 지침에 의하면 각 직종별 연수비용을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선집행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중도탈락률이 100%나 발생하는 기관 또 0% 이런 기관에 선집행을 하셔서 이 예산이 다 낭비가 되는데 환수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부족하면 인력공단에서 보완 답변 또는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예.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취업에 애를 많이 썼는데 올 4월 30일 기준으로 상당수 기관들의 취업 실적이 전무했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질문드리는 게 맞지요, 내용은?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정선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산하기관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선 위원** 예산은 지금 어디서 땀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취합해서 따시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도 다 따지시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또 기재부에 예산 딸 때도 고용노동부에서 따시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이정선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이런 부실이…… 지금 위에서는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지표는 잘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왜 현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는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이런 식의 부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해외취업에 있어서 알선현황을 보니까 기도 안 막힙니다. 알선율은 전부 70%, 100%가 넘는 데도 있고요. 99%가 넘는 데가 있는데 취업률은 2.3%, 2.5%, 0.8%, 1%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어떤 부실이 있는지.

취업 종류를 보겠습니다. IT나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알선을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을 알선을 해야 되는가, 맞춤형 알선을 해야 되는데 IT나 의료는 알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6.8%, 19.4%. 왜? 여기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아무나 갖다 할 수가 없으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그렇습니다.

○이정선 위원 나머지 토목이나 사무·서비스 이런 데는 144.7%, 99.9%,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은 1%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하시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이정선 위원 이런 예산은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다시 저는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순 예, 간단히 하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수기관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률 기준을 해서 40%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는 기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 위원 환수하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환수하고 그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취업률이 30% 미만일 때에는 차년도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알선과 관련해서는 취업률을 따짐에 있어서 알선은 구직자와 구인자의 수요에 맞추어 가지고 예컨대 5배, 10배를 알선을 합니다. 그중에 몇 명이 취업되었느냐를 따지다 보면 당연히 취업률이 낮게 나오는데요. 좀 취업률을, 알선 적중률 측면

에서는 개선과제가 많습시다라는 다른 측면에서도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하여간 적중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노동부가 지난 7월 5일 날 부처명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변경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정책과 패러다임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변화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또 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노사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애초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 역할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데 결산자료를 보면서 노동부가 자기 본연의, 이미 그동안 노동부로 있을 때에도 노동부가 자기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교육과학부, 문화체육부, 여성부, 모든 쪽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자리창출사업이 타 부처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그……

○이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고용노동부 결산을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또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비정규직 전환기금은 전액이 불용되었다, 이런 문제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예산들이 다 불용이 되었는가, 또 고용유지·교대제전환 지원도 한 푼 쓰이지 않았고 또 중소기업고용안정자금 대부하는 것도 16.3%만 집행률이 되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왜 이렇게 불용되거나 아주 낮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답변 올리겠

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와 관련된 창출 사업은 다른 부처와는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컨대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극히 정부 전체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미경 위원 제가 지금 물은 것에 먼저 얘기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고용 유지·촉진이라든지 실업지원, 교육훈련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세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불용 부분은 원래 기간제법이 개정되고, 그당시에 그럴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효과가 상실됨에 따른 보전적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책정한 사항이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대부라든지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 지원금 부분들은 2008년도 하반기 이후에 급격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여건 변화가 있었고 그 뒤에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수요가 예상과 달리 변화가 됐다라는 측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 과정에서 이미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런 부분이 감안돼서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제로이고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제로로 나와야지 맞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부분은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 국회에서 달아 주신 부대의견이 그런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했는데 그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경 위원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노동부가 얼마나 고용대란이 온다라고 엄살을 부렸는지 하는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지원금이 제로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노동부가 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하반기에 몰아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을 24개 부처에서 10조 9126억 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0%였는데 노동부는 지금 85%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부처도, 우리가 어제 환경부 결산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아까운 돈만 나갔다.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몇 %를 집행하느냐의 문제도 또 문제로 짚어봐야 되겠지만 집행된 이 내용도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문제였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저소득층의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하고자 했던 일자리의 결산 내용에도 제가 지금 짚은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었다,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이 마구잡이로 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저희들이 경제위기가 심한 단계에서는 우선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급하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로 보충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미경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런 상황이 극복되면 평시 상황에 맞는 경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400조가 넘는 국가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마구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좀 짚어봐야 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라고 하고 있으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짚어봐야 되고…… 저는 이것은 감사원 감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처에 대한 이 돈의 사용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예산의 낭비,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 불황이 오면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 대책이 무대책으로 나와 있다 하는 점에 대해

서 알고 있습니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여성 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아니,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요. 고용 불황이 닦혔을 때 여성이 얼마나 많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대책을 세웠느냐 이 문제예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경기가 어려워지면 먼저 여성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항이고, 회복될 때는 다소 더디게 되기 때문에 중점을 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위원** 2009년도 고용통계에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 중에 여성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경 위원** 정말 문제지요. 지금 고용노동부가 또 일자리에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넓혀야 되는 하나의 목표가 되고 있는 여성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96%가 여성이다’ 이렇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노동부 안에서 한 번도 제대로 중요성을,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 2009년 5월 고용통계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96%가 여성이다…… 제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마는, 실제로 96%가 여성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 정도는……

○**이미경 위원** 몇 %가 여성인지 분명하게, 그러면 분명하게 그 통계를 찾아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경우에 보통 여성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여성 고용이 형편없이 낮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50%를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아주 목표의 중요 목표로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 이 예산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목표, 과제 목표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일자리는 여

성부 소관이다’, ‘재직여성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미루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책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재직여성이든 경력 단절된 여성이든, 어쨌든 여성의 일자리 문제,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중요 과제로서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어차피 여성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처, 저 부처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포괄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도 여성 고용의 확산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가고용전략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냥 간단하게 더 덧붙이겠습니까, 저는 추가질문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순** 예, 그러세요.

○**이미경 위원** 고용노동부가 지금 제대로 된 여성 고용에 대한 증진 대책 그리고 이 불황 속에서 밀려나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상 지적되는 문제지만 출산여성신규축진장려금 82.2% 불용,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27.4% 불용…… 이런 문제들에 잡혀져 있는 예산조차도 이렇게 불용되는 데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이 점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심각하게 고민되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국가 전반적인 고용과 관련되는 총체적인 계획·전략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아까 결산보고 때 이월액이 410억이고요, 불용이 784억이지 않습니까? 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게 또 대부분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던데요. 요즘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의 집행률이 37%이고 청년인턴제사업 집행률이 8.6%이고, 이게 낮은데…… 또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사업의 예산이 배로 늘었고요, 그리고 청년인턴제사업도 100억이 더 늘었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자리 부분에 제일 역점을 두고 계실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그런데도 예산은 더 증액된 것,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등 예산 규모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예산 규모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불용 이런 부분들이 또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취업인턴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요가 더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중소기업 인턴으로 가서 경험한 분들이 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취업된 비율이 8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봐서 예산 편성도 거기에 걸맞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적으로 보충해서 하도록……

○**조해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짧게……

○**조해진 위원** 예, 그러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중소기업 청년인턴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2만 5000명이 일반 행정인턴처럼 연초에 일괄 다 모집되면 6개월 경과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업으로 청년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중 분산된 결과 이 정규직 전환 예산 소요가 작년에 적게 일어났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이미 인턴에 참여해 가지고 6개월 도과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이 이월된 부분과 올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

을 올리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걱정한 것에 비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고용이 빨리 되지는 않았는데 이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잡혔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률이 1.2%인데요, 30억이 잡혔는데 삼천몇백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작년에 평택의 쌍용차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 자체가 원래 긴급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취지는 대량 해고가 막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때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도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 그런 제기를 그때 했었는데 결과가 지금 1.2%밖에 집행이 안 됐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 평택의 쌍용차로 인해서 지역 일자리 사정이 대단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로 고용개발촉진지역을 작년 8월 13일 날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그때 이후에 하고 나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평택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되거나 신설되거나 증설되거나 그런 조업 개시라는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실적을 뒷받침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생겼다라는 말씀이고……

○**조해진 위원** 그게 한두 달 안에 그렇게 요건이 갖추어져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당한, 반년이든 1년이든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은 그해, 작년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일 텐데……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래서 작년까지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습니다. 마는 올해 들어와서는 확실히 요건을 갖추는 사업장이 늘어서 아마 올해 목표액은 거의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때로부터 1년 반 사이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

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는 지난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그 지역으로 가게 된다는 점까지 같이 아울러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이런 고용, 긴급 고용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될만한 업체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있다는…… 이전해서, 평택 지역으로 회사를 옮기거나 거기에서 증설하거나 해서 고용을 추가로 하는 업체들, 해고 근로자들을 다시 일자리 만들어주는 업체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렇습니다. 평택에 사업장이 옮겨 온 경우, 협력업체들이라든지 옮겨 온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그 지역으로 기업체가 늘면서 그 지역의 구직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다 보니까 지정 당시의 여러 가지 지표하고 1년 뒤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더니 BSI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실업률도 엄청 낮아졌고 피보험자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 지표상 이런 확연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업체 선정과정의 정확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은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저희들이 통계를 통계청 통계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DB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실사를 통해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때 우리…… 고용개발촉진지역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것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렇습니다. 최초였습니다.

○조해진 위원 했고, 여기를 처음으로 지정했던 건데 효과가 성과가 좋으면 이런 게 또 다른 데도 적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최초로 평택시가 지정이 되었고요. 1년을 단위로 해서 금년 8월 10일까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이런저런 제도의 이용과 더불어서 상당히 일자리가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다른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번 고용개발촉진지역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례에 대한 보완적인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는 고용개발촉진지역의 진입요건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퇴출요건이라든지 중간에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재지정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예산 집행부분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십만 명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 이게 원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그걸 우리 부처에서 수용해 가지고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나 취업 성공률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새 정부가 공약으로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맞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잘 따져 보고 가급적이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잘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해서 실현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도저히 그리 해도 이것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보완적인 걸 다시 건의해서 계획을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국가 주요 고용정책으로 정해졌으니까 어떻게든 실현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자는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조금 현실하고 이렇게 미스가 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그냥 단순히 어떻게든 주어진 목표만 달성하겠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여건의 변화가 국내외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조금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실적은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저희들이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선호하는 부분하고 비어 있는 일자리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고, 동시에 세계로 뻗어 나가는 청년들의 미래가 대단

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취업 자체도 중요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아주 종합적인 그런 접근을 할 사항이 바로 이 글로벌 해외 취업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중도 탈락률이 한 절반가량 되는데 개개인에게 집행된 지원금은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실제로……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입니다.

중도 탈락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시행된 연수시간에 대해서만 연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됐습니까?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2009년도 고용보험 등에 대한 기금 적자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고용보험 지출액이 6조 6188억 원, 고용보험 지출액은 전년 대비 1조 2345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적립금은 6조 2583억 원으로 단기금융상품 1조 5150억 원이 감소했어요.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액은 2008년에 3661억 원에서 2009년에 1조 535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 실업급여 계정 지출 대비 적립금 배율은 2008년도에 1.6배에서 0.8배로 감소하고, 2010년에는 0.7배로 하락할 전망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한다면 적립금으로 실업급여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2009년 실업대란에서 실업 급중에 따른 실업급여 비용을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립금에서 충당한 것과 같이 누적적립금은 위기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0년에 0.7배인 수준을 최소한 1.5배까지 높으려면 보험료를 조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더 상세한 것들은 서면으로 기금 적자에 대한 대책, 보험료의 인상에 대한 안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2008년까지는 실업급여의 적립금 준비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그 기준을 미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원래 실업급여 지출요인이 크고 경기가 좋아질 때는 지출요인이 내려가는 그런……

○**홍희덕 위원** 어쨌든 1.5배인데 아주 절반 이하로 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그렇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는 체납문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2923억 원이고요. 결손처리된 것이 664억 원 또 산재보험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6126억 원이고요. 불납결손액이 1210억 원 등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등에 따르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납자의 재산, 골프장 회원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재산을 확인하고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했구요.

또한 보험료를 체납한 병·의원 등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체납보험료를 우선 충당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들 병·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이 체납보험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2009년에 1억 이상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53개 사업장 157억 원, 산재보험료는 140개 사업장 500억 원에 이릅니다.

기금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체납보험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의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보험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자 때문에 적립금의 운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기금은 2008년에 경제위기로 대부분의 공적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

스 수익률을 낼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잘 하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09년에 보니까 고용보험은 12.2%, 산재보험은 9.52%의 수익률을 올렸어요. 그렇지만 기금규모가 고용보험·산재보험, 아마 13조 원에 비해서 운용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내역을 보면 주식형, 대체투자, 실물자산 부동산, PEF 사모투자펀드 또 특정금전신탁, ELF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은 공적 기금으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윤 추구가 당연한 목적도 되겠지만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투자대상과 방법이 공익에 또 반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는 기금의 취지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수익률은 기금 부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균형 잡힌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투자내역 중 직접투자 및 사실상 직접투자와 같이 운영되는 투자내역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부 투자내역하고 PEF 사모투자펀드의 세부 투자내역, 특정금전신탁의 투자대상과 조건을 8월 말까지 자료를 필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그 부분은요 나름대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유 자산 운용은 저희들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공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문 인력으로 자산운용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자산운용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상품선정위원회 이런 형태로 해서 지혜를 모으면서 두 가지, 안정성·수익성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하신 자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예, 그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삭제되는 것과 관련해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민간우선선정직종 훈련을 수행하는 대한상의가 공공훈련기관에서 삭제되고 민간훈련기관으로 전환이 됩니다. 정부에서 1994년 당시에 대한상공회의소를 공공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매년 300억 원의 정부 보조금으로 직업훈련을 해 온 것이지요.

문제는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산업인력공단 소유이던, 사실상 국가 소유지요. 전국의 8개 훈련원의 대지 및 건물을 상공회의소에 무상 양도 또는 증여를 했습니다.

8개 훈련원 대지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총 376억 원, 현 시가는 1118억 원으로 평균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시 소재 대지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3억 9000만 원에서 460억 원으로 117배 상승을 했습니다.

민간 직업훈련원이 되면 일반 직업학교와 다를바 없는바 무상 양도된 국가 자산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부동산과 그에 따른 종물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공회의소는 몇 년 전에 강원도 훈련원에 직원연수원을 지으려고 시도를 했고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인 훈련비를 수년간 불법적으로 적립하여 500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고 그 수익으로 운영비와 직원 성과금을 충당하는 등 내역도 없이 사용해서 감사에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횡령의 책임자도 처벌하지 않았고 불법 적립금을 환수 조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불법 적립금을 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2009년 기준 678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민간 훈련기관이 될 경우에 이미 상공회의소 소유가 되어 버린 토지 1100억 원, 예금……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사용해서라도 이것마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그러세요.

○홍희덕 위원 예금 678억 원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돌려받지 못한다면 국가 재산, 국민의 세금에 손실을 입힌 것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계속 훈련 목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공공기관도 아닌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감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대한상공회의소가 성격상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공훈련기관으로 있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순기능도 있었습시다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역기능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였는데요.

말하자면 기업체의 훈련 수요를 더욱더 중시하는 문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기업체에 근로하고 있는 재직자의 향상 훈련보다는 양성 훈련에 여전히 치중한다는 문제라든지, 민간기관이면서도 경쟁을 소홀히 해서 공급자 중심의 훈련을 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연의, 본질적인 성격에 맞게 민간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한 사항이고, 동시에 그렇게 한 경우에 국가 재산의 지속적인 훈련 업무 담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상 그런 목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철저하게 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줬던 그런…… 결국은 국가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시간이 저렇게 가니까 한 가지만 또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로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2008년도 감사원에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법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적용해서 우선 시정조치하고 일부만 과태료 부과나 사

법처리를 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도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법보다 자체 집무규정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2008년에는 14만 건 중 14만 1317건, 97.9%를 이렇게 자체 집무규정으로 했고요. 2009년에도 93.4%에 대해서 시정조치만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사법 조치는 5%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주들이 과연 법을 제대로 집행하겠느냐, 따라 하겠느냐…… 법 위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산업재해가 OECD 국가 중 사망률에서부터, 발생 건수에서부터 지금 최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위에 이렇게 집무규정을 가지고 솜방망이로 해서 사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또는 안전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지적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지금 관련 규정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런데 고치는 그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시행규칙을 또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실효성 없는 것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행령 중단하는 것이…… 2년 안에 세 번 위반을 해야…… 1차, 2차, 3차,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반의 정도에 상응해서 위반을 더 많이 하면 부담이 더 많이 되게끔 차등적으로 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봐서 법령 체계상……

○홍희덕 위원 그렇지만 이미 지금의 시행령에도 법 조항에 따라서 과태료 차등 규정을 두었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도 감경하고 있잖아요?

그것 좀 잘 살피셔서 지금 시행령 고치려는 것을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정리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희덕 위원님이 요청하신 그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위원장 김성순 다음에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 잠깐만, 자료 요청 잠깐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이미경 위원 지금 홍희덕 위원님 질문 잘 들었는데요.

아까 상공회의소가 지위가 바뀌면서 그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 국가 자산의 무상 양도받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잘 알고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서가 만들어 지시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예, 다른 위원님에게도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지속되게끔 하면서 그 방안을 정리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률 하위 10대 사업을 제가 좀 거론해보겠습니다.

교대제전환 고용유지 지원사업 0%, 무급휴업 근로자 지원사업 0%, 아까 전 위원들도 다 언급을 한 겁니다. 연장급여 1.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사업 1.2%, 건설근로자계속고용지원금 사업 1.3%, 청년인턴제 사업 8.4%, 취업격려수당 10.8%, 요양비 대부사업 16.1%,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16.9%,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단 운영 21.1%,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여기 10대 사업 중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이 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예산 현액이 전혀 없는 곳이 지금 두 사업입니다. 무급휴업자 지원금 경우에는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됐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사례가 없어서 집행률이 제로였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다음에 열 군데 중에서 다섯 곳은 예산 현액 대비 1.5% 미만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그런데 물론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인 과제로 시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사업 수요를 예측하고 일자리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상황이 또 급전되면서……

○신영수 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이렇게 돼서 앞으로 더욱더 유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수 위원 특히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인 경우에는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의 탁상공론을 대표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이 앞섰다고 지적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서 도입한 제도가 되었고 그래서 한시적으로 설정한 것인데, 성격상 교대제전환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가 사업장 전체의 작업 형태를 교대제가 가능하게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통상적인 휴업 하는 경우보다 사업장의 근로 형태를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와중에 실물 경기가 빨리 회복되면서 사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용유지 신청 건수가 엄청 줄었다라는 것이 뒷받침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신영수 위원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더라도 제로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10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으로 되는 것이 일곱 군데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보험기금을 너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이 2007년도에…… 적자입니다. 5763억 원, 2008년도에 5698억 원, 2009년도에는 2조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에 기금 재원의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이 2009년도 결산 결과 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7월 1일에 시행한 고용보험법 84조에는 여유자금의 적정 규모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고용안정 및 직능사업 계정은 1배에서 1.5배, 그다음에 실업급여 계정은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고용안정·직능사업 계정은 1.2배입니다. 그리고 실업 계정은 0.8배로 모두 법률을 위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신영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우리나라는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합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는 주로 실업보험이라고 합니다마는.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실업보험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노동시장 기능을 발휘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제도화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금의 과다 활용 문제라는 것도 그런 노동시장 대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영수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지금 적립금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논의를 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신영수 위원 이것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나름대로 공감을 이루어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신영수 위원 지금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세부사업이 몇 개쯤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지금 현재 2010년도에 한 11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작년도에는 130개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나름대로 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냥 정책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반영한다든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신영수 위원 이것 사업 숫자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사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특히 실업 계정인 경우는 0.8입니다. 그래서 실직자 보호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적립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 같은 것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요율 조정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예산액보다 감액된 사례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사례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양비 대부사업의 경우에 당초 예산액 25억에서 96%를 줄여 가지고 예산 현액을 1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16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16%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필요성보다 요건을 너무 강화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요건 만들 때 현실적인 사항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현액이 증액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요. 모두 다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여섯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반회계인 경우에 1조 1359억, 집행률은 63%, 불용액이 286억 원, 그런데 고용보험기금이 예산 현액이 2조 1567억입니다. 집행률

이 지금 46.4%고 불용액이 1조 1570억 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먼저 말씀하신 산재요양비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원래가 요양을 신청하고도 30일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평균적인 요양 승인기간이 35일 정도입니다. 즉 5일 정도만 넘는 정도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수요가 좀 적었고 그다음에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전체의 한 20% 이내 수준이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은 나머지 예산에 비해서 적게 나간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의 편성 부분들은 좀 현실을 감안해서 수정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을 했지만 고용노동부 예산 편성 그다음에 집행 과정에서 계획성이 좀 없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기금을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예산의 적정성, 공정성 이것을 좀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파악이 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당초 예상 대비 실제로 집행 결과와의 괴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야말로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금과 일반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 목적에 맞는 범위 내의 사업이라면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인프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의 전입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수 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노동부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글로벌 취업 지원이라든

지 청년 직장체험 프로젝트, 해외 취업 연수, 이런 것들이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급히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검토도 하지 못하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성과도 별로 없고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우리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 좀 발상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 2300시간되는 것을 300시간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고용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을 잘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용 정책에서 그때그때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정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는 없지만 좀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도 개별 사업 하나하나가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 이런 것을 포함해서 노동시간 줄이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임금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일자리, 만날 큰 소리만 치지만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민간사업운영기관을 통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사업주단체, 출연기관, 대학, 직업알선기관.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능을 강화하고 또 그 역할을 더 높여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인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 자꾸 공공부문의 자리를 줄여라 이러니까 그것을 그냥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그 방침에 따라서 위탁기관에 넘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몇 개 사업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무조건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정부는 나름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숙제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즉, 공공과 민간이 서로 상생적으로 역할을 잘하자라는 취지로 보면 되고요.

특히 민간사업운영기관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예컨대 대학에서 재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전에 산업현장과 친화적인 학사 운영이 되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향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학에서 이런 유사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취업 지원 기능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연계 기능 부분도 감안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 역할도 소홀히 할 생각이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 본 위원도 무조건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부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지나치게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턴 1인당 28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실시된 이후에 민간사업 운영기관의 목록과 위탁운영 및 지급 건수, 지급 금액, 결과 보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탁운영비는 왜 지급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학 같은 데서 취업을 산업현장과 연결시키는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위탁운영비를 왜 지급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홍영표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2009년 현재 177개 기관, 2010년 현재 160개 기관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인턴이라는 게 중소기업의 인턴 취업 일자리를 개척해 가지고 청년하고 연결해 줘야

되는데 고용지원센터의 공무원들이 현장의 일자리를 일일이 개척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기관에서 일정한 인력과 그 다음에 인턴 참여자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무튼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알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리고 청년인턴제 일반회계의 경우에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92.2%밖에 안 되고 이월액이 103억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니까 민간 취업알선기관인 운영기관에 이행보증보험 한도초과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위탁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유형을 보면 중기업 같은 경제단체 그리고 대학 같은 기관이 있는 반면에 민간 취업알선기관이 있습니다. 즉 직업소개소인데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자금 여력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업무를 맡겼다가 이행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한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영세한 직업훈련소까지 위탁을 맡겨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저희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위탁운영기관을 전문화,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홍영표 위원** 그런 측면에서도 고용지원센터 같은 것을 강화하면서 위탁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위탁의 최소화 또는 말씀하신 취지가 효과성을 높이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는 역량 있는 위탁기관들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좋습니다.

지금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국고보조사업과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둘 다 교육비를 100% 지원합니까,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전직 실업자 훈련이나 청년 직업 훈련 이것을 위해서 지금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해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반 회계에서 나가는 국고보조사업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양쪽에서 추진되고 있나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일반 실업자인 경우,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에 가입된 적이 없는 실업자인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내보내고 있고요. 전직 실업자인 경우는 고용보험기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게 지금 100% 교육비 지원이지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약 6000개 정도에 달하는 훈련기관에 대해서 국고보조 현황, 수료 인원, 취업 인원 등에 대한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전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완전히 개별적인 경우, 개인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했는데 지금 실업자 훈련, 그러니까 훈련기관에 맡겨서 하는 실업자 훈련 물량을 조사하는 게 있고요.

직업능력 개발 계좌라는 것을 발급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좌제 사업은 이제 시작된 지가 1년이기 때문에 조금 덜 정착화되어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아니, 지금 저희 방에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게 전산화가 안 되어서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주실 수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전산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그러니까 아주 개별적인 자료까지, 개인 개인의 자료까지 요구를 하시면 그 부분은 아마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부분에 걸리면 모르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관 임서정**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성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일 금요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성실성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확인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청문회법 제11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지금 위원님들의 자리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보시면 그 내용은 크게 인사청문 경과, 질의·답변 요지, 위원회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홍영표 위원** 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덕성 측면에서는 이번 개각에서도 드러났지만 병역기피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도덕성의 문제로 보입니다. 박재완 후보자는 지난 1976년 신체검사 과정에서 고혈압으로 판정이 되어서 현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고혈압이 160에 달해서 정상적인 군복무가 어렵다 그래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은 고혈압이 160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징병검사 당일 날 고혈압이라는 것을 검사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래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고혈압이 160이 넘으면 통상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은 완전한 병역기피는 아니지만 절반의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박재완 후보자가 고혈압과 관련된 집안 내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과 특히 병적기록표상의 공식적인 기록에 근거했을 때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 의한 보충역 판정은 절반의 병역기피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도덕적인 문제는 1996년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강동구 명일동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만 한 채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후보자는 주소 이전이 자녀의 어떤 학교 배정이나 아파트 분양, 탈세, 금융소득 공제 등과 관련된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했는데 자녀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렇게 위장전입으로 주소지를 강남으로 옮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는 매년 수백 명의 국민들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박재완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세종시와 4대강 등 중요한 국정의 정책들에 대해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서 일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많은 분열과 대립, 갈등을 조장한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으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지난번 청와대의 인사에서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MB 정부의 중요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다시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장관이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유연성이 OECD 국가 중에

서도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들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오프도 그것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추진되는 데 있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고수해서 노사관계를 앞으로 더 악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3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도 지금 MB 정부가 노동3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노동부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 위원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영수 위원** 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영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는 경과보고서(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병역 문제는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고의로 기피한 사항이 아니고 또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필했고 가족력도 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병역문제는 충분히 소명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도 이사를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상황이고 아까 홍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목적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사를 가려다가, 전출을 먼저 해 놔다가 못 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위장전입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수석 때 행한 행위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 본질하고 다른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에 대한 사항은 본인도 청와대 있을 때 노동에 대한 전문위원 일 좀 했고 그래서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견을 갖고, 소신을 갖고 또 전문지식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또 의견, 홍희덕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희덕 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위원입니다.

박재완 우리 고용노동부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직에 임명돼서 지금 벌써 청문회를 마친 공직후보자도 있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가 죽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우리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위장전입, 법을 위반한 그런 부분의 문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 등 좀 상대적으로 깨끗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현장 노동자 출신 위원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홍영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OECD 국가 중에 노동 유연성이 결코 우리나라가 뒤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요, 유연하게, 유연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노동 문제를 너무 법치에 의존하는, 법으로 갖고 노동·노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철학이 너무 친 기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동부장관은 적어도 노동자 쪽에 조금이라도 저울추가 더 기울어야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부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미경 위원** 우선 지금 청문회가 각 위원회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총리 청문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절대 안 돼야지 되는 다섯 사람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박재완 후보자가 적격이나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좀 나쁜 점이 덜 드러나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도 이번에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관·총리 인선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고용노동부장관을 굳이 문제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바로 이렇게 회전문 인사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임명해야지 되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문제로 지금 총리도 물러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고용노동부장관에 꼭 와야지 되는가, 그렇게 다른 인사는 없는가, 이것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미안함을 가지고 물러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1~2년은 가야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좀더 변화·확장시켜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점은 오늘도 제가 결산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용에 대한 일자리 만들고 하는 문제를 가장 일자리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것은 기재부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산자부가 있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노동부 들어가 있는, 앞에 고용이 붙어 있는 이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노사 관계 그리고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의 문제, 이 문제에 방점을 두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답변은 그냥 노동부장관 하기보다는 경제부처 일을 여전히 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으로서의 우선 철학에 있어서 맞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와서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환경부나 노동부나 우리 사회 안에서 미래의 가치지만 아직은 약자의 위치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부처에 들어가서 열심히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경부장관은 국토해양부 저 밑에 관리 같은 발언만 하고 있고, 혹시 지금 신입되는 장관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기재부에 소속된 어떤 사람의 역할 같은 정도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걱정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중에서 후보자가 보충역으로 병역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얘기했습니다. 뭐 어릴 때 경기를 앓았다는 등, 그다음에는 일상생활에서도 평소 혈압이 높은 점이 문제는 아니지만 계단 오를 때, 술 마실 때 혈압 상승이 나타난다. 계단 오르고 술 마실 때 혈압 상승 대부분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해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제가 그때에 갑자기 평상시에는 약 안 먹고 그리고 징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날 혈압 상승이 올라와서, 160이 넘어가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게 본태성고혈압이라고 하고 이 후보자 때는 그게 많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한 10년 이후에 지금은 아주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병역에 있어서의 보충역 정도로 빠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병무청이 24시간 검사를 해야지 된다는 새로운 방안까지를 낼 정도로 돼 있는 그러한 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왜 담당 의사의 도장도 그때 빠져 있느냐’, ‘정밀검사 한 자료도 왜 그 병무청 자료에서 빠져 있느냐’ 해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은 사실 다른 장관들의 문제점이 더 많이 있는 청문회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된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박재완 후보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이찬열 위원 예.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 먼저 들었으니까……

○이찬열 위원 이찬열입니다.

○신영수 위원 찬반 찬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성순 아니, 그런데 먼저 들어서……

○이미경 위원 그러면 찬반 찬반 하시죠.

○이찬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번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성순** 아니, 먼저 들어서 이미 내가 얘기해서 그래요.

○**이찬열 위원** 사실 저는 국무위원후보자, 박재완 후보자에 대한 편중된 사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사실 '우리 주 업무는 아니지만 4대강 사업을 국민 74% 이상이 반대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추진을 하나' 그랬더니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이 실패할까 봐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국민들의 뜻을 모르고 대통령 최측근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 홍수대책이라고 그러지만 홍수가 발생했을 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고용효과를 증대시킨다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준설토 운반하는 트럭까지 합쳐도 한 사업장이 보통 3000억 이상의 공사장인데 일반 노동자들 일하는 것은 아마 한 50여 분 정도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뭐 파악은 못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무슨 고용효과가 있겠으며 지금 사업은 대기업만 살찌우는 그런 4대강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굳이 공사를 2012년까지 완료시킨다 그래가지고 모든 서민들은 다 경제가 안 좋다고 아우성치는데 22조 원이나 되는 큰돈을 짧은 기간에 투입시키는 이런 토목공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박재완 후보자 같은 분들이 옆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것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업 자체로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 내지는 지금 4대강 사업에서 이점을 얘기하는 부분의 불합리한 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박재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생각이 무엇인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용노동부장관을 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부처와 달리 최소한 서민인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이런 편중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과연 노동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해 줄지 큰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는 몰라도 이 부분으로 돌아봤을 때 박재완 후보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제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이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선 위원** 저는 박재완 후보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상당한 개혁과 앞으로 고용노동부의 발전을 위해서 자질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인의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보면 여야가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야말로 어디에 치우침이 없이 열심히 하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질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의 칭송을 다 받았다는 것은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고 또 유연성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병역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본인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신의 아픈 얘기를 사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오픈을 했고, 그 부분에 전문 진료기관에서 검증을 받았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그 분의 그런 병력에 관해서, 질병에 관해서 많은 분의 증인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잣대를 전문성 없이 진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의원으로서의 과도한 책무를 넘어선 과도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끝내고 국정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부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두루 했기 때문에 폭넓은 시각으로 오히려 고용노동에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폭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이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문회를 했을 때 답변 하나 틀림없이 아주 명쾌한 답들을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는 답변도 했지만 그 정도의 장관 후보라면 지금까지 어떤 장관 후보보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노동현장에서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완 장관 후보자는 아주 적절한 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우리나라가 사람이 많고 인재가 많은 나라라고도 또 볼 수 있지만 역대 정부 또 각 인사 때마다 나름대로 검증하고 골라서 인선을 한 분들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보면 또 먼지가 안 나는 분들이 없는 것을 보면 박재완 후보자 정도 되면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또 자기관리 해 온 측면이나 양심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실력이나 전문성,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정도 사람이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훌륭하고 더 흠이 없고 더 실력이 뛰어난 분을 또 찾아서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있는 분들 중에서 고르고 선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박재완 후보 정도면 우리가 믿고 고용노동부의 일을 맡기면서 또 우리 국가, 우리 환노위가 우리나라의 고용노동업무를 같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의논하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걸 몇 가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병역문제는 병역은 이행을 한 거지요. 했는데 병종이 현역이 아닌 보충역이었다는 그 차이인 것이고 현역으로 복무를 하지 왜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복무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본인이 자가 판단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현역을 못하니까 보충역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가 병무청, 국방부가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시점에 와서 그때를 돌아켜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때의 국가가 판정을 잘못 내렸다, 뭘 잘못 알고 오판을 했다 또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밀 신체검사 결과가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입증을 한다면 현역으로 복무했어야 될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보충역으로 판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도 의심을 해 보고 저렇게도 의심을 해 봤지만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거나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의심하고 본인의 해명을 물어봤을 뿐이고 그런 실제적인 잘못을 제시하면서 잘못된 병역 판정이었다는 걸 우리가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그것으로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진 사람이 왜 보충역으로 복무했을까 하는 것보다도 살아오면서 완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지는 못했는데, 여러 고비 고비 또 위험한 순간도 맞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일을, 격무를 감당해 왔으며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고된 업무가 많은 자리인데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격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위법이라는 걸 본인이 명백하게 인정을 했고 또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그중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위로 자기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부동산 투기라든가 기타 부도덕한 동기로 하지 않았더라는 점은 그래도 이해해 줄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종시 부분에 대한 말씀도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집행을 했는데 실패했다, 결과가 정부가 약속한 대로 행정비효율을 예방하고 또 과학 경제비즈니스도시를 만들어 내서 중부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성장거점을 만들어 내고 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결

과를 못 만들어 냈다 하면 그건 실패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는 그 세종시수정안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부서는 아니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그 권한을 가진, 결정권을 가진 국회에 던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일지 말지 집행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을 가진 우리 국회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안은 철회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해 보지 않은 정책을, 국회 단계에서 거부당한 정부의 안을 실패했으니까 책임져라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발전을 위한 안을 만들어서 시도도 해 보고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해 보고 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인데, 그 중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안 받아들여져서 폐기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실패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성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근무한 경험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실의 사회복지수석보좌관도 했고 무엇보다도 이번 정부에서 국정의 주요 핵심과제들을 다 두루 다루고 만들고 점검하고 하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주요 핵심 쟁점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잘 짚고 나름대로 해법도 고민하고 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임명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꼼꼼하게 많이 알고 또 살피고 해서 벌써부터 우리 고용노동부가 너무 꼼꼼하고 일 열심히 하는 장관 모시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는 그런 여담도 들었습니다마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 아쉬운 부분 있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환경노동위가 그래도 이 정도나마, 아까 말씀하신 상대적으로라도 평가해 줄 수 있는 후보자를 검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이 보고서 작성도 보니까 잘 된 것 같으니까 채택하고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주무 상임위로서 또 따지고 체크하고 편달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일곱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예,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2인 중 찬성 7인, 반대 5인으로 국회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부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회계연도 결산(기금포함)(계속)

가. 노동부소관

○**위원장 김성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전재희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시고 우리 위원회에 처음 나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희 위원** 경기 광명 을 전재희 위원입니다.

제가 16대 때 많은 열정을 가지고 4년간 일했던 그 환경노동위원회에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환경노동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순** 전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법관 위원** 노동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그러합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청년층 고용대책 사업비로 무려 1조 3000여억 원을 투입을 해서 참 열성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청년층 취업촉진사업은 작년에 보면 3000여억 원 중에서 2100억 원이 집행되어 갖고 제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71%의 집행률에 그쳤는데, 일반회계 경우에는 집행률이 91.5%에 이르는데 보험기금 재원으로 한 집행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또 추경을 편성하셨더라고, 47억 원. 그 이유는 뭐지요? 기본 예산도 집행이 안 되었는데 추경예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실무적인 답변을 올리고 제가 추가 답변을……

○**이법관 위원** 예, 아는 분이 대답하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경 때 고용보험기금사업 중에 47억 원이 증액된 것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수준을 2009년 1월에 20% 인상하면서 그에 따른 소요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법관 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지난 5월 현재 6.4%였던 청년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서 지난 7월 현재로는 8.5%로 한 2.1%가 높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아직까지 일자리 사정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다가 청년 고용의 문제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그리고 인프라,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관계고 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데 청년 실업이 높아 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지요.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잘못된 정책수립이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라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이런 3개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고 그 집행률도 72%, 42%, 82%로 굉장히 낮아요. 중복되고 유사해 가지고, 의욕만 앞섰지 실질적인 효과 있는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잘 좀 챙겨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리고 역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중복된, 각 부처마다 또 고용부 내에서도 각 담당 국이나 실마다 각자 계산해 일자리를 합산해 놓고 보다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것에 예산만 해서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7월 6일 날 청와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202개 일자리 사업을 134개로 줄인 것만 보더라도 그런 허상에 따른, 실적 위주의 통계 수치에 따른 이런 정책을 각자 내놓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거를, 본 위원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대책을 좀 문서로,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지난 7월 6일 날 마련한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각 부처의 사업들을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그 부분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예, 좀 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보고서 또, 계속 내가 좀 챙겨 보려고 하니깐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또 그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사업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보면 요지가 6개월은 인턴으로 고용을 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 6개월은 정부에서 50%인가 지원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노동부 발표로는 1만 5000여 개 중소기업에 3만 2000여 명을 인턴으로 채용을 해서 이 중에서 1만 8500여 명이 인턴과정을 수료하고 그중에 1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82.9%의 청년 실업 해소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이런 식으로 내면, 아까 자꾸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왜 청년 실업률이 높아 갑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중도 탈락한 인원이 거의 8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7964명이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중도 탈락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러면 최초 채용자 1만 2000명 중에 중도 탈락한 7900여 명하고 끝까지 인턴을 수료한 1만 8000명을 합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따지면 몇 %가 되는지 아세요? 47%에 불과해요, 47, 8%. 이게 숫자놀음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고용부에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율을 계산하든지 해야지, 3만 2000명이 인턴에 응했다가 중도 탈락한 사람 많고 자기를 편의대로 수료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규 취업자는 몇 %다' 이런 식으로 발표해 놓으면 실제 청년인턴제, 거기에 취업했던 청년들이 볼 때 체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다 한 일이 40% 밖에 정규직 취업이 안 되었는데 80%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 믿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숫자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인턴이라는 과

정을 마친 다음에 그 마친 사람 중에서 정규직으로 얼마가 가느냐라는 것이 맞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과정을 마친 게 수료자고 수료자 중심으로 하면 맞습니다.

○**이법관 위원**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 한번…… 여기에서 지금 토론할 게 아닌데, 인턴으로 처음 채용된 사람 중에서 얼마나 정규직으로 되었느냐가 맞는지, 꼭 그렇게 해야 맞는지 한번 봅시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를 얘기를 해 줘야지, 정책부서에서 편리한 대로 기준을 정해서 성과를 내놓는 거는 문제가 있다, 나는 그런 지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대학 졸업생 가운데 취업률을 따져야지 입학생을 가지고 취업률을 따지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턴도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고 마친 사람을 중심으로 취업률을 따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법관 위원**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따져 봅시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리고 6개월간 인턴으로 고용되어 있다가 또 6개월…… 정규직 전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계속 정규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하여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성과는 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순전히 단기적인 말이지요, 장기적인 청년실업대책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과연 그 이후에 정규직으로 된 1만 5000여 명이 얼마나 지금까지 제대로 장기 고용돼서 근본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한 자료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우선 양해해 주시면 실무 국장이……

○**이법관 위원**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인턴이 지속 가능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 현재 인턴 6개월을 지나서 정규직 전환된 뒤에 1년이 도래한 자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이법관 위원** 아, 그래요?

(김성순 위원장,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그래서 현재에는 정규직 전환 후에 6개월…… 아, 정규직 전환 시점에 고용 유지한 비율, 그것이 한 80%대 되고요. 그 이후에……

○**이법관 위원** 알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지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러면 1년이 수료된 이후에 실태가 어떤지 다음 국감 때까지 좀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그리고 해외……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러는데, 해외취업연수 지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서 2009년부터 해외연수 지원을 상당히 해 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실태를 보면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법관 위원**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이법관 위원** 이게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금년도에 26.5%에 달하고 그다음에 국내 101개 연수기관에서 연수시켜 갖고 해외에 취업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법관 위원** 그런데 ‘온누리아굴라’라는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시킨 사람 하나도 해외에 취업한 일이 없고 전부 중도 탈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101개 국내 연수기관 중에 절반이 넘는 53개 기관에서 해외 취업을 전혀 못 시키고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연수기관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연수기관을 선정한 것인지, 절반 이상의 연수기관에서 해외 취업을 못 시키는 그런…… 그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국내 연수만 시켰다 뿐이지 해외에 취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못 시키는 그런 연수기관을 두고선 무슨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인분석과 앞으로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짧게 먼저 말씀드리고 자료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이법관 위원** 예, 그러세요.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고용노동부인력수급정책관 임무송** 중도 탈락 사유를 보면 국내에 취업한 사람들이 한 36%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나 개인적 사유로 그만두는 사람이 한 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수기관의 성과가 매우 기대에 못 미칩니다. 주된 이유는 연수기관들이 아직은 아주 영세하고 소규모인 점 그리고 국내에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영어능력이라든지 해외에서의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참여한 기관들이 4월 말 기준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3개 기관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연수과정을 3개월 또는 6개월 과정으로 시작한 기관이 많아서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들 기관에 취업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법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열 위원**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

차관님, 고용노동부차관 맞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2009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유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그 내용이 뭐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그것?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지금 위원님

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대부용자사업을 말씀하시는가요? 혹시 생활안정……

○**이찬열 위원** 19개 주요 대부용자사업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그 사업 내용이 뭐냐고요. 뭐 하는 사업입니까, 그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컨대 각 계층별로 어려운 사정에 있는 동안 유동성 관련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리로 대부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요. 일정 부분들은 좀 집행이 부진한 측면도 있고 일정 부분들은 효과를……

○**이찬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할 거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니, 누구를 위해서 이 대부용자사업을 하시느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아마도 위원님께서서는 효과가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듯한데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참 저는 이것을 보고 말입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서, 올해에는 이름까지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차라리 그냥 노동부라고 갖고 있어도 거기서도 국민들로부터 야단을 맞아 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고용노동부라고 이름을 바꾸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다 노동자, 서민,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적용되는 사업 아닙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아니, 그것 찾아보시지 않아도 돼요. 그것 찾아볼 게 뭐 있습니까? 있는 것, 상식적인 것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숫자 따져 가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고용노동부의 명칭 변경과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각종 대부금 사업의 효과와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열의가 떨어졌다는지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바꾸면서도 속

에서 이렇게 썩어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은 모르셨을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점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들이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영표 간사, 김성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들 고민에 보태서……

○**이찬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구체적인 것 여기 잔뜩 들어 있어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인 것 뭘 원하십니까, 구체적인 것들?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구체적인 것. 빨간 글씨로 그냥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창피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노동자, 일반 서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고용무시부 아닙니까, 고용무시부? 또 내지는 고용유기부. 이런 대부용자사업만으로 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 60%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노동부에서 크게 대오 각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좋은 것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이런 부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인데……

그 사람들을 잘살게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서 헤쳐 나와서 잘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인정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인정하신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도 없고……

최소한 2010년도 아직 많이 남았지요, 올해는. 여기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을 지금 알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앞으로 추계라든지 제도 보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그리고 참 이런 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약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담보 조건을 내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서민들을 위해서 던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 돼서 회수가 되면…… 당연히 회수는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가장 상식적으로 봐도 대부해 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부지기수일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가능하면 그 부분에서는 사회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률과 관계없이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는 여성들의 고용 기회 확대와 취업 여건 개선, 또 고용안정을 위해서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 및 여성고용친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또 매입비, 임차비 등을 용자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그런데 38억의 예산 중 33억 5600억 원을 집행해서 88.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모든 지적한 사업에 비하면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사업 특성상 사업주의 투자여력이 부족하거나 운영비 부담이 크거나 보육아동이 부족하거나 장소 확보가 곤란하면 100% 집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이찬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근처 부근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여 기숙사로 전환하는 경우와 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유통업이나 금융업 등, 또 여타 업종에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으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면 우리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

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최소한 60% 이상이 되어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고 선진국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여성 고용률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경제수준과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게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측면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사업 부분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면밀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열 위원**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참 노동자들……

제가 아침에 대우자동차 앞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농성하는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오늘로 1030일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차관님.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차관님이 한번 다녀오시면 그분들 많이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직간접적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위원장 김성순** 이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한나라당 부천 소사 차명진 위원입니다.

차관님, 사회적기업이라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한 200군데 좀 넘고……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350개 정도 됩니다.

○**차명진 위원**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고용 인원이 한 1만 명,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제도가 생긴 지 몇 년 됩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한 3~4년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2006년 그때부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차명진 위원** 중간 평가를 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보니까 일단은 주로 취약계층이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은데 취약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의 비율이 한 30%?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30%대에……

○**차명진 위원** 예, 그렇게 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그리고 또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보다는 인증 취소되는 곳도 계속 생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좀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 특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건비도 좀 보조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확산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중간 평가를 해 보고 대책을 구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사회적기업 부분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모자라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농경 사회에서 공동체적인 정신이……

○**차명진 위원** 아니, 기본적인 정의 얘기하지 마시고 중간 평가한 것 있으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산도 안 되고 취약계층 고용 비율도 적는데 좀 확산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많이 고용시키는 방법이 뭔가 평가한 게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서 사회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을 해서 잘 북돋는 방식으로 하려고……

○**차명진 위원**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두루뭉술하게 하는

얘기하듯이 차관님 얘기하시면 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기업진흥원도 설립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고요.

○**차명진 위원** 그러니까 더 잘되게, 더 실질적으로가 무슨 뜻이나 이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죽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제가 인증 취소된 데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학교 청소, 우리밀 쿠키 제조, 공공미술, 산모도우미, 주거복지 집수리, 느릅 식품공장……

이게 있잖아요, 보면 일반 민간 시장하고 그 시장의 성격이 구별이 안 되는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노동부에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서 지방 자체든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 있지요, 단순 쓰레기봉투라든가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제도를 강력하게 개선해서 실제 민간 부문이 다른 영역을 개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일정하게 시장에 대한 억지 개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분야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복지 분야에도 사회적기업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하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더라도 비수급자라도 극빈자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먹는 것 잘 먹습니다, 그래도.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주거를 좀 고쳐 준다든가…… 그러면 이게 취약계층의 그 노동력이 못 받쳐 줄 수도 있는데…… 혹은 이불 빨래를 해 준다든가…… 이불 빨래를 좀 이렇게 건어서 해 줘서 상당히 불결한 생활 조건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복지 계통을 좀 개발을 하시라,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시장으로 하

는, 거기에 납품하는 이런 업무를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좀더 제도화를 하시고 복지사업 같은 경우를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겠으니까 고용노동부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고용노동부와 관련해서 제가 죽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의 상당한 사업이 일정한 부분 도덕적 해이를 조장케 한다든가, 실업급여 같은 경우, 또 일정한 부분은 집행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실업급여 또 청년인턴제 이런 것들은 너무 시장에 과도하게 깊숙이 개입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집행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좀 털어 내시고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들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가 된 마당에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사회적기업같이 취지가 좋은 부분을 또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실적이 안 좋은 사업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업 이런 걸로 만들지 마시고 사회적기업을 좀 잘 정착을 시키셨으면 하는데 지금 제가 한 4년 됐는데 중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잘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여기 차관님 이하 국장님들 차제에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서 가지고 이 부분들이 잘 정착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의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회적기업이 초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의 판로 개척 지원 이런 부분들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분야도 일반 시장과 상충되지 않게끔 틈새 부분을 잘 착안해서 접근하시라는 말씀도 주셨고 한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담당 실무국장이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짧게 한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 고용서비스정책관 장의성입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진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서 자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원이 많아도 자립할 수 없는 구조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존립하기가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립이 가능한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라고 보고 세제 지원하고 또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등 관련 분야에서 관련 부처가 협조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와 MOU를 체결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합동해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오전에 보충질의를 미리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면 5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해진 위원님 하신 다음에 홍희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 위원장님, 5분입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5분이요.

○조해진 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순 예, 하세요.

○조해진 위원 차관님, 고용평등기금사업 중에서 여성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쭙어 보고 싶은데요.

둘 다 지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은 88% 집행이 되었고 또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100%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이 중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12%가 미집행으로 남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실무국장으로부터 1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민간이 보육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해진 위원** 민간이 특정 직장에다가 설치할 때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조해진 위원** 그 직장 기업, 업체……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기업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는데요. 그것은 신청이 다소 작년에 좀 부족해서 약간의 예산 집행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보육시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당초에 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던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요가 24개로 일단 시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0% 거의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직장 종사자들의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많지요, 특히 여성들?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5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한 52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 비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53%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비율은 한 30% 조금 밑돕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 보육시설 수요가……

○**조해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어 본 게 그 직장에 다니는 여성근로자들이 우리 직장에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이런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수요는 굉장히 크지 않나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희망들은 많이 하고 있고 보육시설 선호도 조사해 보면 직장보육시설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다만 보육시설 설치 공장 지역이나 이런 데 여건이 안 좋거나 또 아동을 직장까지 데리고 가기가 어려운 취업모들은 대개 집 주변에서 오히려 보육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역으로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이런 예산 지원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 특히 여성 근로자들 계층은

소위 소득 하위계층이나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인 경우가 많겠지요, 혜택을 받는 주체들이?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현실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기업들은 대부분 상당 규모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임의 설치, 중소기업에도 관심이 있는 사업주들이 임의 설치를 한 120여 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숫자로 보면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부분은 따로 공동으로 중소기업주들이 합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금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작년도 예산이 26억이고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24억이었는데 24억은 100% 집행이 됐고 26억은 88%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직장보육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더 높이고 아울러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또 공공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도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은 없으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저희 쪽……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직장보육시설을 늘려 나가는 데 부닥친 애로사항들이 그것을 설치할 때 건물의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예컨대 4층이라든지 5층이라든지 이런 높은 층도 안 되고 인근에 주유소가 있다든지 조금 좋지 않은 건물들이 있을 때는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동시에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관계 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해야 되고요. 즉 의미상으로 여러 가지 유아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보완장치를 강구한다면 그런 기준 규제를 조금 개선하는 접근도 필요하고 동시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원될 때 그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시설에 의존하는 이런 부분의 육아도 필요하지만 여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주십시오.

○**홍희덕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김성순** 아니, 홍희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홍희덕 위원** 폴리텍대학교 공사 시설비 관련

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2009년 추경예산 편성할 당시에 폴리텍에서 낡은, 창원을 비롯한 전국의 6개 캠퍼스 공사비 429억 1797만 원을 배정받았고 m²당 건축비가 178만 원, 토목·조경·철거 등 시설비를 합친 공사비는 m²당 201만 원에서 2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 기준 대학 공사는 m²당 121만 원을 80만 원 이상 초과한 것이고요. 작년에 지적받았지요.

또한 감리비도 건축물에 적용되는 1%대의 감리율 대신 도로, 항만 등 건설 공사에 적용되는 5% 책임감리율을 적용해 일반 감리비 2억 7458만 원보다 21억 1480만 원이 많은 23억 8900만 원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게다가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을 예정인 6개의 캠퍼스 공사비를 지난번 추경에 한 번에 469억 원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결산한 것을 보니까 시설 확충 본예산 307억 3500만 원, 추경 469억 6300만 원, 총예산 776억 9800만 원을 마련해서 지출한 것이 688억 200만 원입니다. 88%를 집행했더라고요. 이월액은 67억 6600만 원, 불용액 21억 3000만 원입니다. 과다 계상된 건축비용을 그대로, 7년간 집행할 예산을 1년에 대부분 사용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묻고 싶고요.

폴리텍 6개 캠퍼스의 건축과 관련해서 비용 지출의 세부 내역, 증빙 자료를 8월 말일까지 빼먹지 말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폴리텍 이사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말씀 기회를 좀……

○**홍희덕 위원** 예, 좋지요.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하세요.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이사장 허병기입니다.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번 국감 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대학이 작년에 469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은 작년에 실업 대란 시대에, 저희 대학이 말이 대학이지 사실은 들어오는 국민 누구나 1년 또는 2년 과정을 통해서 전부 취업을 시키는 기술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 배려로 받았고 지난번에 지금 두 가지 지적하신 것, 약간 과다 계상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 소명을 드렸습

니다.

저희는 학교 교사가 아니고 실습동인데 지금 로봇이다, 수중 잠수다, 특별한 장비를 요하기 때문에 일반 대학 기준의 평당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특수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청구했고 금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 80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희덕 위원** 총장님, 하여튼 어쨌든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것 그것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세부 내역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신청할 때는 낡은 건축물을 개수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비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겁니까?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병기**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35개 캠퍼스 중에서 19개 캠퍼스가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졌던 아주 낡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산업화시대에 기본 과목을 가르치던 정말 바퀴벌레와 쥐가 다닐 정도의 낡은 건물에서 태양광이나 로봇이나 지금 284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 오고…… 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것이고, 그 19개 중에서 우선 급한 40년 넘은 비 새고 이런 6개 캠퍼스관에 해서 거기에 총력으로, 단 1원도 손실 없이 저희가 매일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홍희덕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허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명진 위원**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취업 관련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차관님, 제가 요즘에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청년 취업시켜 달라고 이력서를 아주 많이 받거든요. 이거 해결 방법이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저는 위원님께서 좋은 방향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

각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우선 83%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많아도 50%대, 60%, 40% 이렇습니다. 우선 그만큼 인력 공급 차원에서 눈높이가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동시에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쓰고자 하는 그 분야들하고 안 맞는 미스매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부분들에 많이 창출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민간의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고용창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의 발전, 규제완화 이런 부분도 같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우선 대학생들을 졸업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으로 가까이 직접 갈 수 있게끔 대학의 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능적 또는 내용상의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되어야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한쪽 일방만 바뀌어 가지고는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찾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해 가지고……

○차명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대답 같아요. 그렇지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미스매치를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차명진 위원 전반적인 경기 문제, 그로 인한 일자리 부족 문제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 미스매치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반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 민간의 고용서비스 시장은 발전되게끔 하면서, 아울러 공공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중개 사업들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중에서도 중견, 또 괜찮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골라 가지고 그 빈 일자리에다가 대학졸업생이라든지 전문계 졸업생을 매칭을 시켜서……

○차명진 위원 차관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안 해도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관님, 아까 제가

말씀한 것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진짜 ‘고용’이라는 이름을 유사 이래 처음 붙였으면 그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업무를 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체질 개선을 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청년실업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년실업의 미스매치 해소가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이 고용노동부 혼자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물론 구체화시키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폴리텍 같은 데를 상당히 양성해서 ‘내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헛교육이었구나. 실제 현장교육을 다시 받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요. 청년인턴제 같은 것, 그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요. 그건 없어도 다 취직합니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마치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고용부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를 딱 세운다, ‘이게 장기적으로 앞으로 4~5년 후, 10년 후에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평가를 해 줘 가지고 ‘이 대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환경부 하듯이. 저는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고용은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집행보다는 ‘정책’ 여기에 저는 방점이 찍혀야만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꾼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말씀에 90% 정도는 동의하고요. 즉 산업현장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고용영향평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청년취업인턴제 부분들은 청년들이—백문이불여일견입니다—막상 가 보면 ‘괜찮다’라는 장점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더욱더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차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수 위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영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사회적일자리 성과가 미흡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 8개 부처, 청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약 45개 됩니다, 총괄해서요. 그래서 추정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살펴보니 전체가 1조 5644억이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1조 5029억이 집행돼서 집행률은 9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지금 16만 789명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디딤돌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이렇게 구성돼 있고, 추정 포함해서 2347억 원 중에서 2119억 원이 집행돼서 90.2%의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한 후에 1년 후 민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은 경우는 7.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92%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 놓고, 92%나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국장이 일차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영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아무래도 우리 고용노동부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고용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5개가 되는 그러한 사업을 고용노동부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유사성이 있는 부분들은 같이 묶는 것이 좋겠고요, 조금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은 특성이 살아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보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지금 사회적일자리사업도 문제입

니다. 보면 주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떼어버리면 이 사회적기업이 다시 적자로 거의 환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주로 인건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부 의존형에서 자립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래서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가지고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 비율을 줄여 나가면서 스스로 설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금전적인 것 이외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사회적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단기간에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디딤돌일자리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신영수 위원** 내용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디딤돌일자리 말하자면 좀 더 나은 일자리로 가게끔 하기 위한 가교로서의 일자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영수 위원** 집행률이 몇 %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집행률이 2009년도의 경우에는 한 60% 정도……

○**신영수 위원** 그렇습니다. 불용된 예산액이 59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3%가 지금 불용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1330명 정도가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디딤돌일자리에서 85%가 지금 거의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보육시설·복지관, 취사보조·보육교사보조 뭐 이런 겁니다. 남성들이 많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에 참여자가 1만 152명인데 끝까지 남은 사람은 4751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도탈락률이 높은 겁니다. 남성 참여율을 높이고 중도 탈락을 낮추

는 방안이 돼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 부분은 직종이 현재 여성 위주로, 여성 친화적으로 돼 있든지 또 해당 참여단체에서 여성을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까라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수 위원** 질문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조해진 위원님 표정을 보니까 시간이 아쉬운 듯한 표정이었는데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조해진 위원** 예, 하나만 더……

○**위원장 김성순** 예, 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차관님, 작년 고용의무…… 의무 고용률이 대기업의 경우에는 2.4%인가요, 올해가? 2.2%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2010년도는 2.3%……

○**조해진 위원** 2.3%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조해진 위원** 지금 30대 대기업 중에서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무고용률을 지킨 대기업은 3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지 못하는 나머지 기업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어떤지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현재 기업 규모가 클수록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수준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높은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분석을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담당 주무국장께서 일차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조해진 위원** 예.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입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대기업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고용의무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하고 큰 기업

어느 쪽이 더 고용률이 높은지 그건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규모가 큰……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큰 기업이 오히려 좀 낮고요, 중견기업들이 더 큼니다.

○**조해진 위원** 고용의무 부담을 지고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볼 때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조해진 위원** 그러면 기업의 경제력, 기업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작은 데가 오히려 고용의무 부담금을 안 지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인력을 쓰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을 안 하면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을 더 고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30대에 못 들어가는 기업들이 나중에 기업 규모가 커져 가지고 고용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면 거꾸로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꼭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별도의 명단 공표 등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노동부 산하기관들도 상위는…… 3% 의무고용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작년까지는 2%고요, 올해부터 3%입니다.

○**조해진 위원** 3%지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조해진 위원** 작년 기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1%, 승강기안전기술원이 1.02%에서 폴리텍이 2.52%까지…… 나머지는 그 중간 그 사이에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2% 안 되는 기관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무고용률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겁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2% 기준했을 때 미달 기관이 산재의료원하고요, 기술

교육대학교하고 승강기안전기술원, 세 군데입니다.

○조해진 위원 그 세 군데는 어떻게 해서 의무비율을 못 채웠다고 봐야 됩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저희가 보 건대는 산재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사·간호사 비중이 크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수 비율이 커서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낮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조속히 의무고용률을 채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 대기업들도 사례별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예, 업종별로 그렇습니다.

○조해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노동부가 그 점에서 제대로 된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어서 고용을 못한다고 하면 결국 누가 고용을 할 것인가, 장애인들을? 그런 고민에 부닥치게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저희들이 독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직종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내지는 교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해진 위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가능하면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경제 논리를 가지고 어느 게 더 이익이냐, 쓰는 게 이익이냐, 돈을 내는 게 이익이냐, 이것 가지고 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하고 있는 작은 규모 중견기업들도 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그러는 거지 꼭 고용을 해야겠다는 의무감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무릅쓰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담금 부담할 여유가 되면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것이 진척이 좀 있기 어려운 것 아닌

가.....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그래서 대기업들은 최근에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고용 모델을 제시를 해서 자꾸 장애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CEO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단과 대기업 간에 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해서 그나마 조금, 2% 밑도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해진 위원 부담금이 어떤 촉진 요인으로서는 작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고용평등정책관 권영순 의무고용하고 부담금은 서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의무고용률에 따라서 연간 대략 한 1만 명에서 1만 5000명 정도가 장애인 고용이 매년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 페널티 형으로 더 부담금을 올릴 거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한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금을 내더라도 의무 불이행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다음 해 되면 또 부담금을 내야 되는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은 하나의 보조적인 의무 이행 강제수단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최소한 그 수준 이상으로 고용을 하게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4%입니다. 4%인데, 오늘 이 자리에도 산하 공공기관장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롭게 생각해서 의지를 가지고 고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민간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이쪽 분야에 수십 년간 관심 가지고 열정적으로 뛰어왔기 때문에 민간 부분은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해진 위원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순 조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더 안 계십니까?

○**홍희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순** 예.

○**홍희덕 위원**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순** 한 가지만 하세요.

○**홍희덕 위원** 차관님, 지난 8월 1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

○**홍희덕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시행된 지 6년째 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그렇습니다.

○**홍희덕 위원** 이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보험에 가입하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있습니다. 귀국보험……

○**홍희덕 위원** 4대 보험, 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여러 가지가 있네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이 중에서 출국만기보험은 특히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퇴직금과 같더라고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그런데 가입만 하고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업이 너무나 많아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연체 횟수는 4680건 또 해당 사업장은 이전 곳에 이릅니다. 연체액은 무려 전체 보험금의 10%에 이르고요.

분명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노동부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지, 연체료로 인해서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부가 지원해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관님!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이 집행을 좀 더 독려해 주시고요. 외국인 근로자 보험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현재 출국만기보험 가입률은 90% 정도 되는데요. 좀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희덕 위원** 그리고 거기 관한 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 이채필** 예.

○**홍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순** 홍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한창 진지하게 진행되는데 끝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차명진 위원, 이정선 위원, 이찬열 위원, 신영수 위원, 이 네 분 위원께서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의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차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부, 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과 환경부 소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성 순	신 영 수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정 선	이 찬 열	전 재 희	조 해 진
주 호 영	차 명 진	홍 영 표	홍 희 덕

○**청가 위원(1인)**

강 성 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병 길
전 문 위 원	원 창 희

○**정부측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직 무 대 행	이 채 필
고 용 정 책 실 장	엄 현 택
노 사 정 책 실 장	이 재 갑
기 획 조 정 실 장	조 재 정

노동시장정책관	이	재	홍
인력수급정책관	임	무	송
직업능력정책관	임	서	정
고용평등정책관	권	영	순
고용서비스정책관	장	의	성
노사협력정책관	전	운	배
근로기준정책관	정	현	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김	운	배
공공노사정책관	이	성	기
정책기획관	조	병	기
국제협력관	한	창	훈
대변인	박	종	길
감사관	정	철	균
경제사회발전 노동사정위원장	김	대	모
중앙노동위원장	정	중	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	영	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유	재	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	민	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양	경	자
한국고용정보원장	정	인	수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이사장	허	병	기
한국기술대학교총장	전	운	기